

새 정부의
5대 건설 정책과제



2017
경제 대한민국 | 건설로 소통하고
스마트하게 건설하자

멈출 수 없는 희망, 경제성장
 꿈꿀 수 밖에 없는, 좋은 일자리
 대한민국 경제,
 그 지속성장의 해답을
 :

건설산업에서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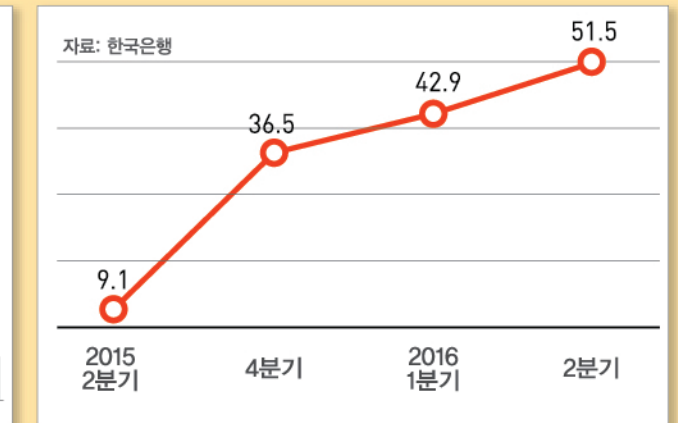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최근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 경제에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압도적

> 국내총생산 내 건설투자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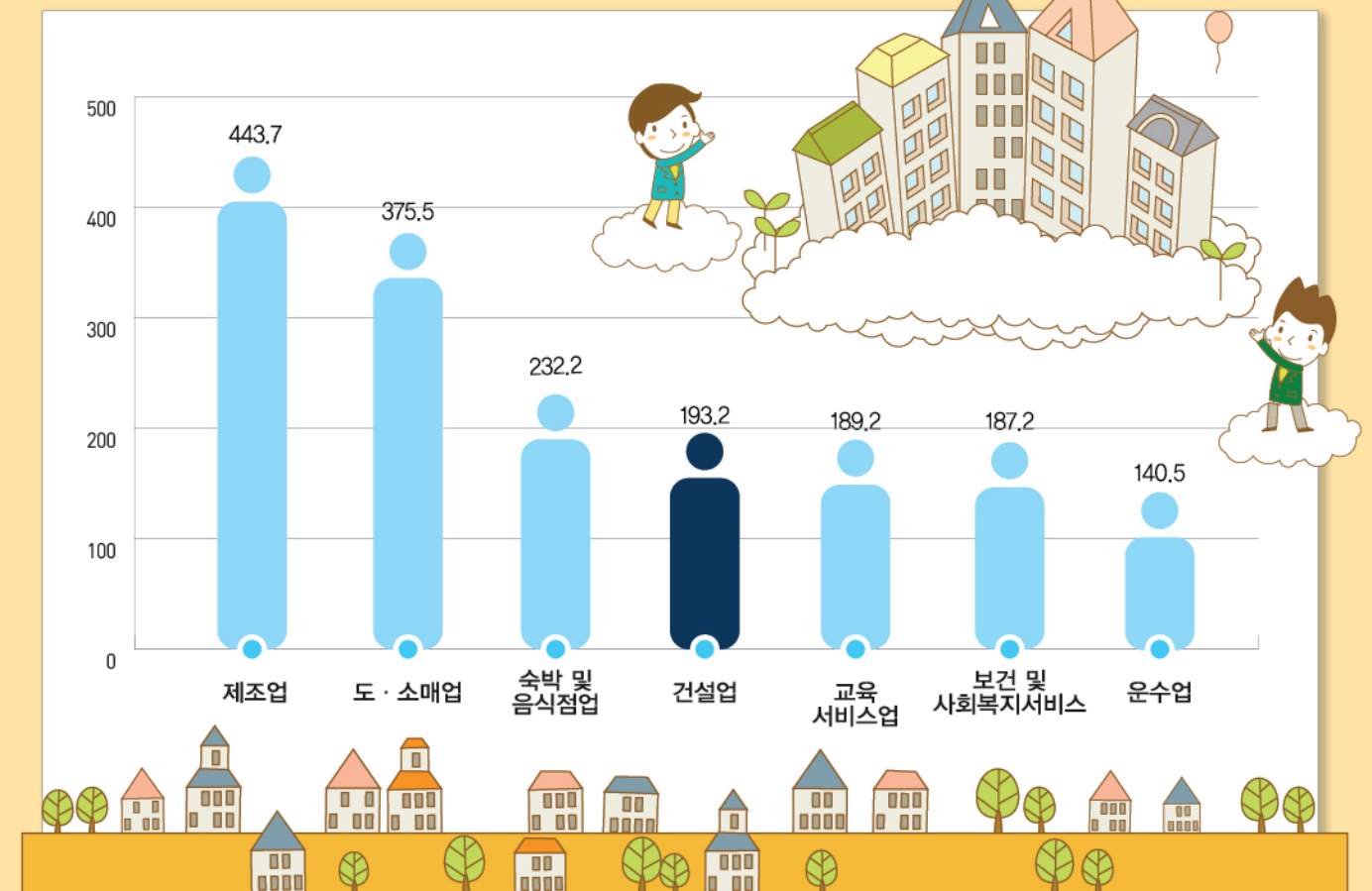


> 건설투자 성장기여율 추이(단위 %)



건설산업은 193.2만명이 종사하는 핵심산업(취업자 수 기준 4번째), 지역경제일수록 성장이나 고용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

> 주요 업종별 취업자수(2016년 12월 기준,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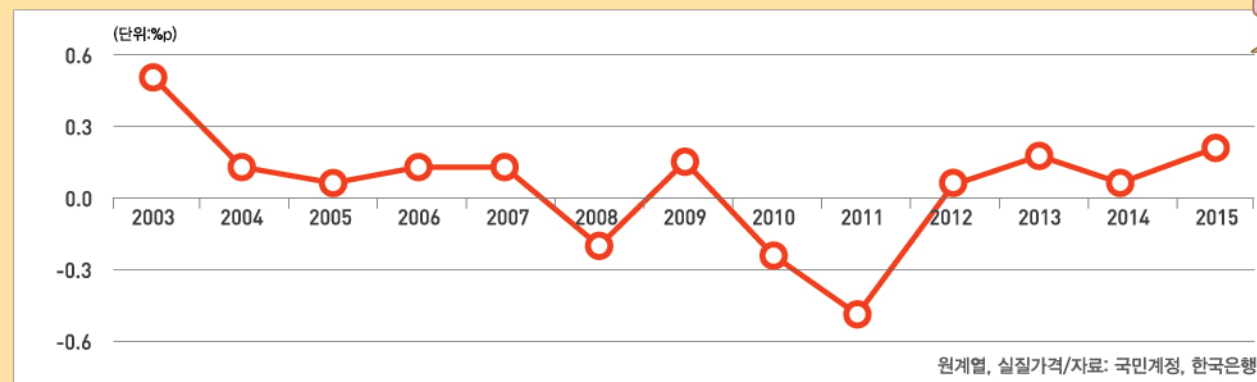


건설산업은 지금,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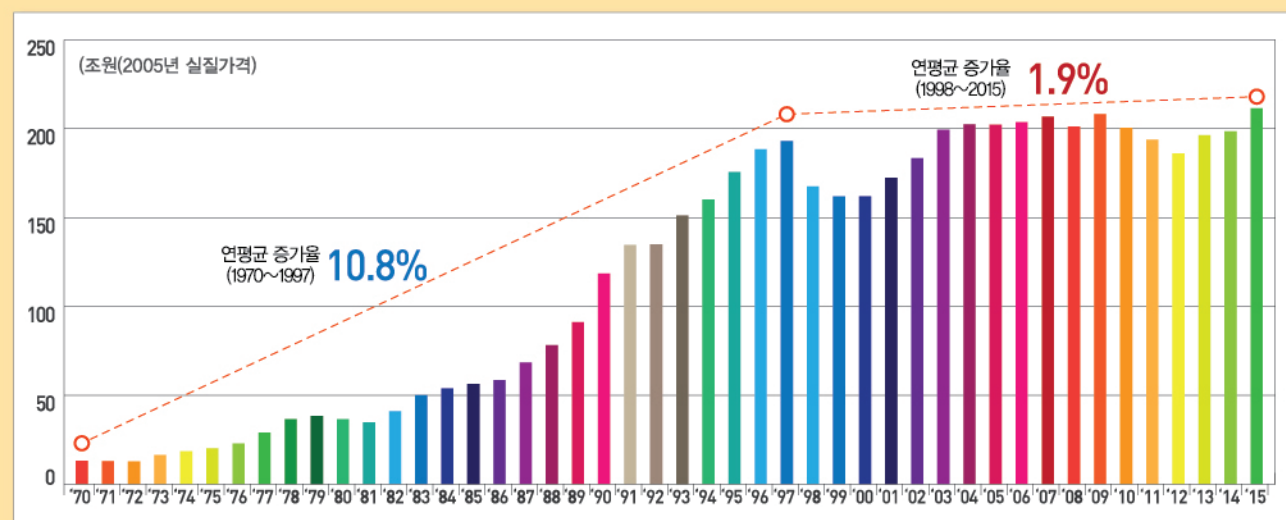
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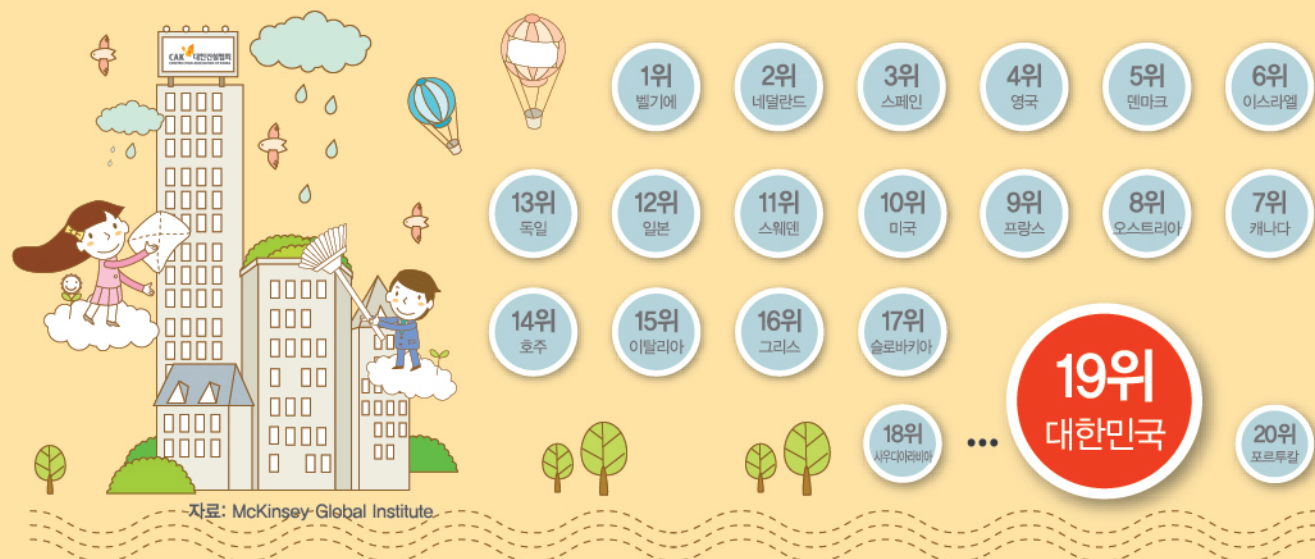
건설산업의 경제성장기여도는 지난 10년간(2003년 ~2014년) 0.5%에서 0%로 감소



이러한 경제성장기여도 감소는 건설투자의 위축에 기인. 2015~2016년 민간주택투자 증가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정체상태



우리나라 건설업 생산성은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 건설산업의 경쟁력마저 잃고 있는 상황



건설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인프라 투자 축소로 인한
건설산업 위상 저하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 추세와 낮은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건설시장 지속적 축소 불가피

건설산업 내부 혁신과
성장 전략의 미흡

경직된 건설정책 운용과 산업주체들의 혁신 및 성장전략 미흡으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

미래 사회변화에의 대응
및 수요 창출 미흡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 미흡으로 낙후산업으로의
인식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 수요자 맞춤형 상품개발 부족

중장기 도시발전전략
부재로 경쟁력 상실

수도권과 지방의 맞춤형 발전전략 부재와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 상실



방향 잃은 건설산업, 어떻게 해야 하나!!

건설산업이 국가의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

01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기



02

건설산업구조 혁신



03

인프라 투자 확대



04

핵심규제 50% 폐지



05

도시경쟁력 강화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 견인

창의와 혁신의
건설산업 조성

01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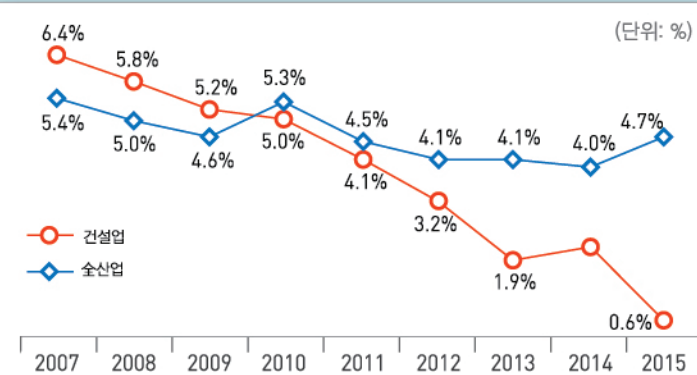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기

공무원가에도 못미치는 저가 낙찰 구조 개선

2017 건설산업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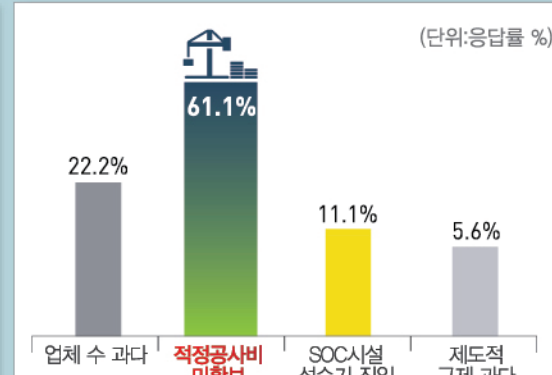
건설기업의 경영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사실상 이익 제로**

> 종합건설기업의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한국은행 및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경영환경 애로사항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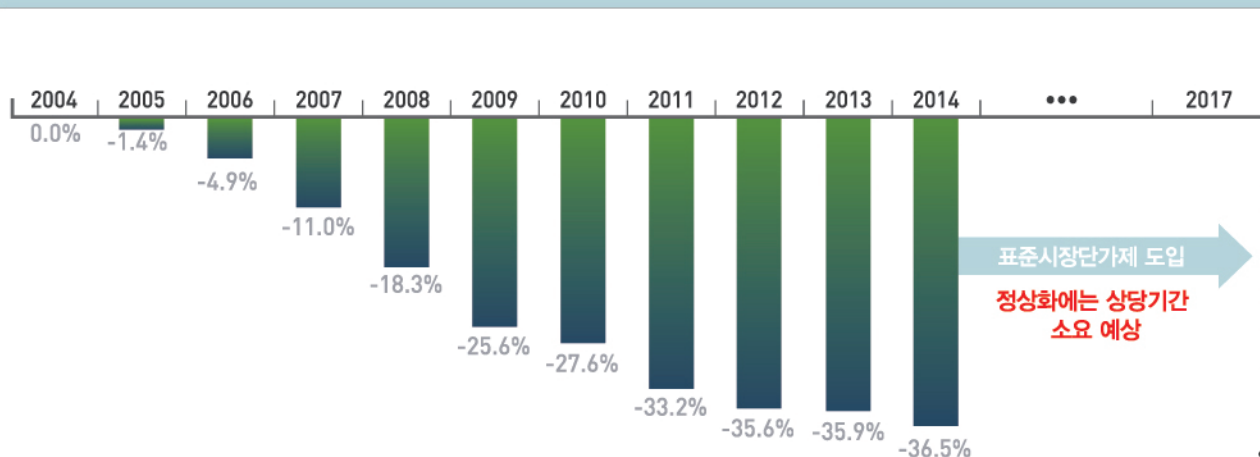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

공공 발주기관의 무분별한 **사업비 삭감 현상** 만연...

- 장기간 왜곡된 (구)실적공사비, 입찰제도 운영으로 단가 지속 하락
- 부족한 예산에 맞추어 설계가격 삭감, 업계 출혈 유도

> 실적공사비 등락(불변가격 기준) 현황



자료: 대한민국 정부(2015)

핵심 정책방향

사업계획 ~ 발주단계

01. 저가낙찰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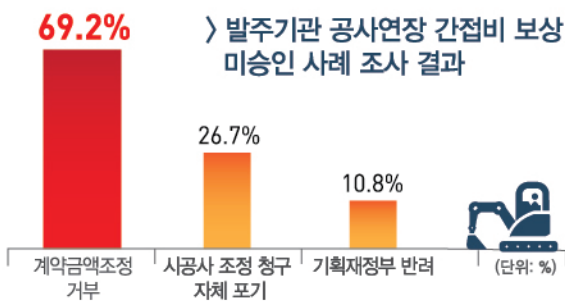
- 적격심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10% 이상)
- 표준시장단가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 공사비 산정
- 부족 예산으로 인한 설계가격 삭감 중심의 지자체 계약심사제 폐지

02. 예정가격제도 등 공사비 산정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정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합리한 예산삭감 기조 변화
-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개발, 예정가격제도 개선
- 지나친 감액 중심의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시 공 단 계

03. 공사비 관련 분쟁 및 보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정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 잘못된 공사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 예산부족에 따른 공기지연 방지를 위해 공사 예비비 제도 도입
-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제도의 현실화 (모호한 현행기준 개선)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6)

'제값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 정착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제고



저가 하도급, 체불 등 건설시장 고질적 문제점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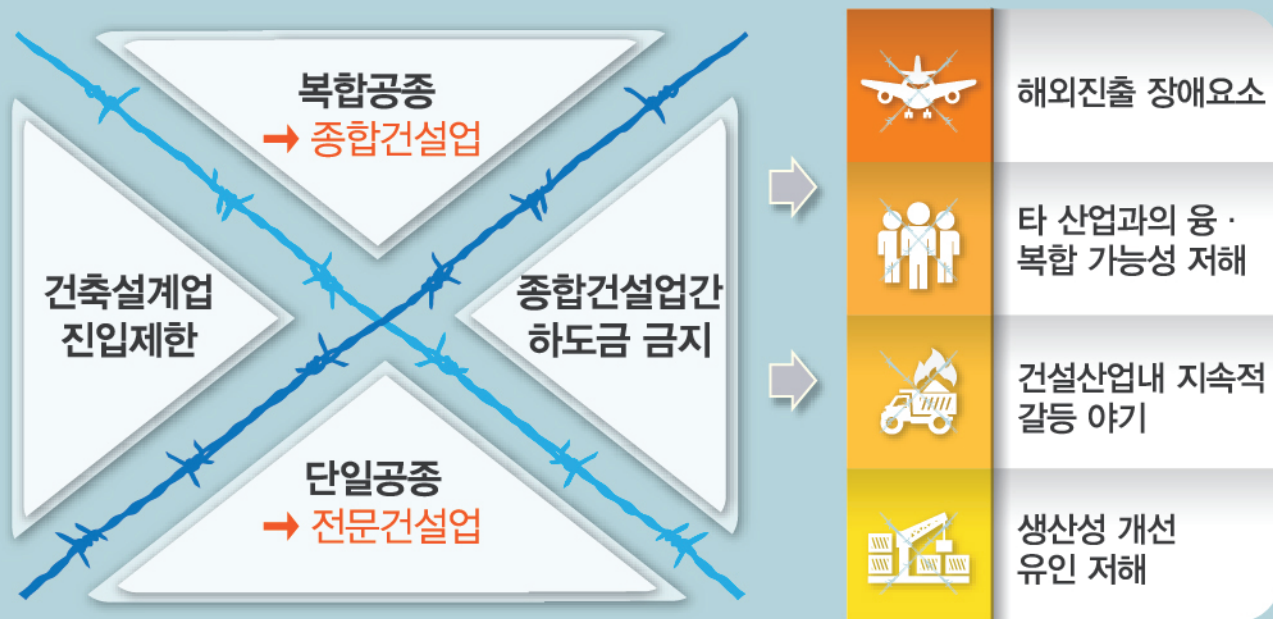
국민의 생명과 편의 증진

건설산업구조 혁신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업역구조 및 발주제도 개선

2017 건설산업의 현실

우리 건설산업은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다양한 제도 속에 위치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 제도는 선진적 **산업 구조 형성에 가장 큰 방해요소**

분리발주 제도

- 국민을 대리하는 발주자의 역량 향상 유인 저해
- 총 공사비의 증가, 공기의 지연으로 국민 세금의 낭비
- 시공 연계성 상실로 시설물 품질 저하
- 체계적 안전관리에 취약
- 하자 책임 주체 불분명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 의무 하도급화로 직접 시공 장려와 역행
- 연계 공종의 하자 책임 주체 불분명
- 기술력이 우수한 전문건설기업의 역차별
- 글로벌 스탠다드와 괴리



01.



영업범위 제한 폐지

생산성 · 기술력이 높아도 경직적 규제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의 손실 축소

- 종합 · 전문 건설업 간 상호 진입 기준 마련
-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건설 관련 공사업 통 · 폐합

02.



융 · 복합형 발주 확대

4차 산업혁명에 건설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제도 환경 조성

효율적인 국민의 생활 환경 제공

- 건축 설계업 진입 허용
- 분리발주 대상 공사 축소
- 시설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간 연계 강화

03.



중 · 장기적으로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복잡 · 다기화된 건설관련 업종의 통 · 폐합, 경직적 진입 규제 개선

주요 내용

영업범위 제한 폐지, 융 · 복합형 발주 확대, 건설관련 업종의 규제체계 일원화, 기업 규모에 따른 시장 구조 재편

기대 효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자의 역량 향상, 유연한 산업 구조로 이행,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우선시되는 정책 방향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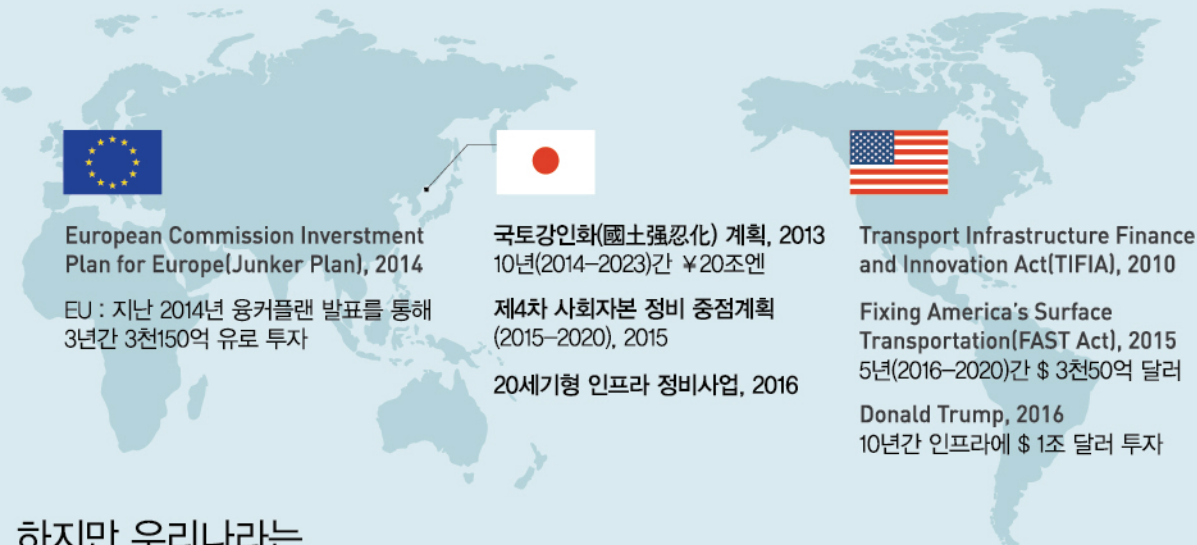


인프라 투자 확대

경제성장 3% 유지를 위해 향후 5년간
인프라 50조원 투자 확대

2017 건설산업의 현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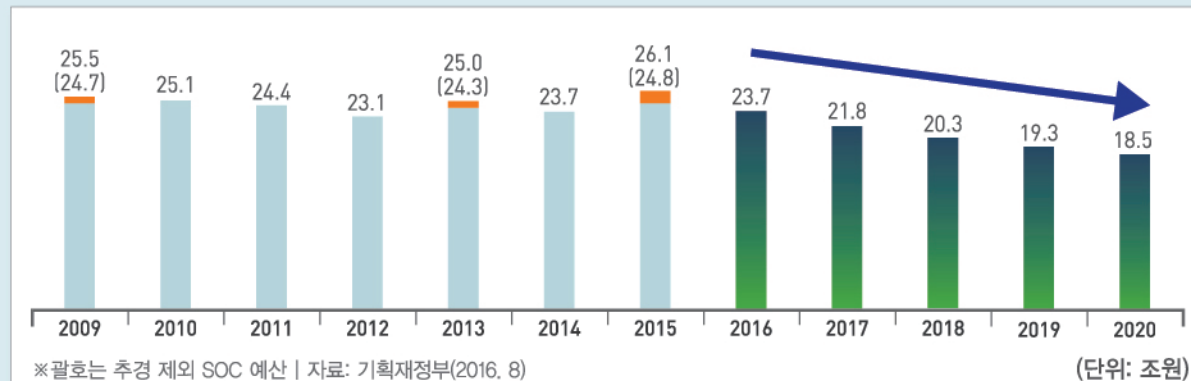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의 정책 방향, OECD와 IMF의 권고에도 오히려 역행

- OECD는 확정적 재정정책을 권고 :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안
- IMF는 인프라 투자가 안정적 경제성장을 담보한다고 강조

> SOC 예산 추이 및 계획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는 필수적

01. 경제성장률 3% 유지를 위해 향후 5년간 50조원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 경제성장률 3% 유지를 위해 향후 5년간 인프라 투자 50조원 확대(연평균 10조원)
- 인프라 투자는 저성장 극복과 저소득층 소득 개선에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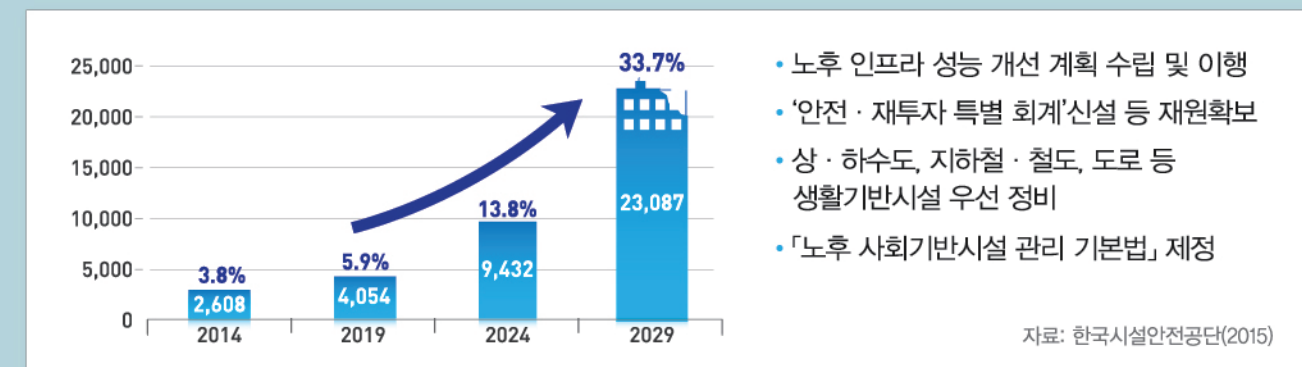


- 인프라 자원 확보 및 사업 추진 절차 개선 (교통세 존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공모 인프라 투자펀드 도입
-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건설인력 육성 체계 정비
-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 벤치마킹

02.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성능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급속한 인프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

> 1·2종 시설물 노후화 전망



핵심규제 50%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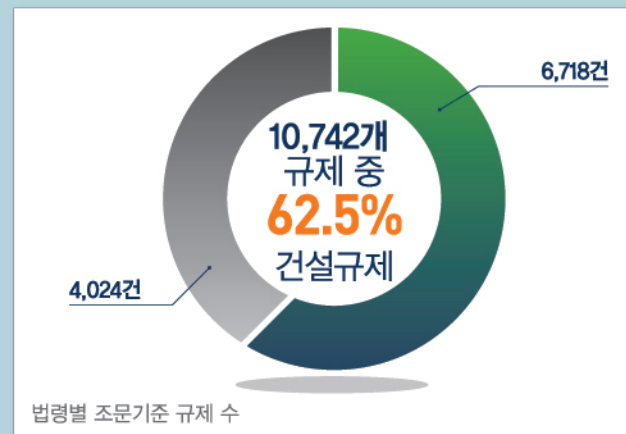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2017 건설산업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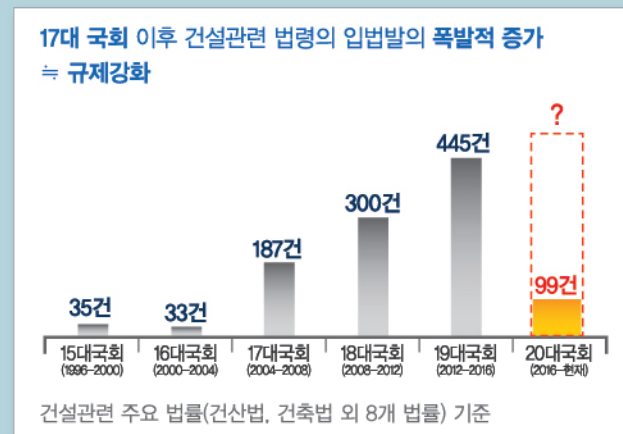
규제의 요람(搖籃), 건설산업

- 건설생산 단계에 온갖 규제로 건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야기와 건전한 성장 저해

> 건설관련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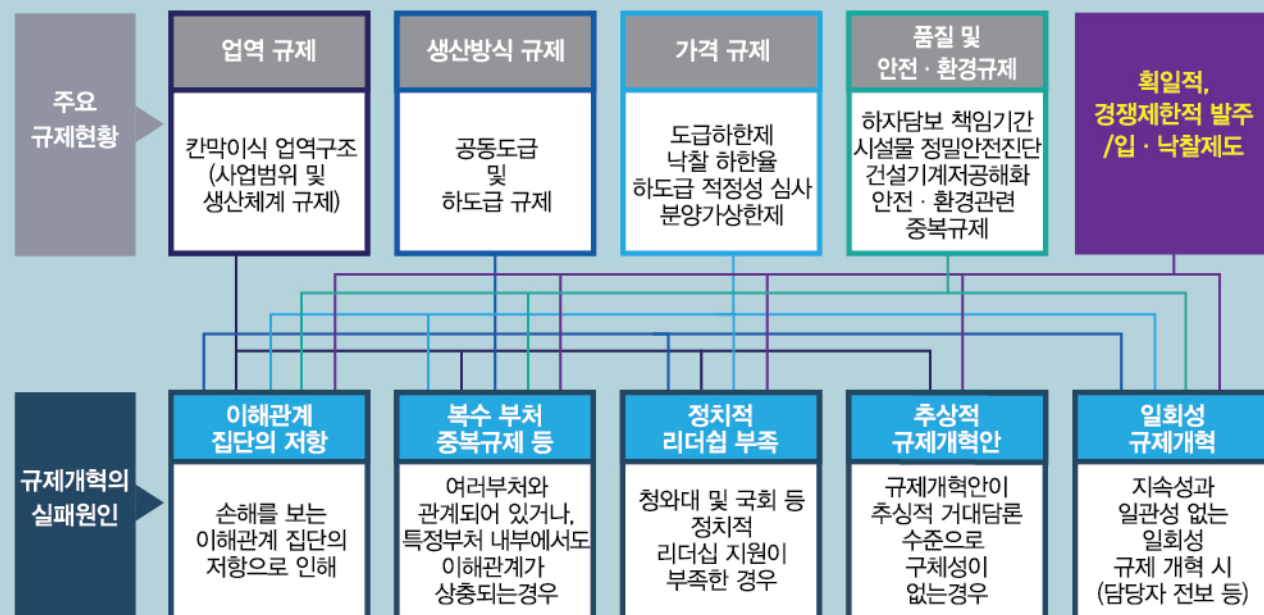
> 주요 건설관련 법령 입법발의 현황



역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건설업계 규제 개혁 체감도 '제로'

- 산업구조 개편 등 건설산업의 발전에 직접 연계된 개혁이 부재하였기 때문

> 건설산업 규제개혁의 실패원인



규제개혁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으로의 변화·혁신 유도

185만 건설업 종사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선도적 산업 체질 개선

01.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산업구조 및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건전한 산업발전기반 조성



시장친화적
규제체계
확립

- 중복, 과잉적 행정제재의 개선 및 실효성 제고
- 비재정 위임사무 규제 정비를 통한 실질적 규제 체계 마련
- 표준도급계약서의 불합리 조항 개선
- 과도한 신고, 인허가 사항 지속적 발굴·감축



규제의
사회적비용
합리화

- 건설공사 신기술 의무 적용제도의 합리적 운용
- 공공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 부적격 업체 근절을 위한 건설업 등록 요건 개선
- 공사이행보증제도,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시스템 개선



산업경쟁력
저해 중복규제
통폐합

- 건설관련 직·간접적 중복규제(169개) 개선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개발(수질환경보전법 외 8개 법률)
 - 하도급 관련 규제(하도급법 외 4개 법률)
 - 건설현장 안전관련 규제(건설법 외 5개 법률)
 - 건설업종 동반성장 평가 등(공정위, 국토부 중복 제도)

0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갑(甲)-을(乙)문화 퇴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주자, 2차 협력자를
포함한 모든 건설참여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발주자, 원·하도급간
거래관행 개선, 장기
협력체계 구축 유도

복합다기한 하도급
규제 완화 및 건설하도급
법률 일원화(건설법, 하도급법)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2차 협력자(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등)

(가칭) 국가건설리더십위원회 설립을 통한 일관된 건설규제개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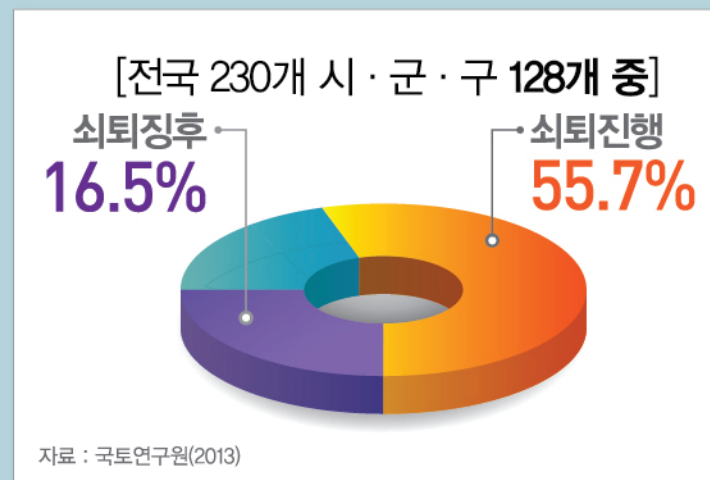
실행방안

-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 법정 민관 합동조직 구성을 통한 규제개혁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 정책담당자의 변경과 순환보직 한계에 따른 건설산업 정책의 단절 극복
- 관계부처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조정·해결

2017 건설산업의 현실

경제는 어려운데, 지방은 쇠퇴하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마저 정체

> 전국 지역별 쇠퇴 현황



> Mercer의 도시 삶의 질 순위(2017년)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 폐지한 수도권 관련 규제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도권 개발을 중복적으로 규제

- 영국은 1980년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였고 도크랜드 개발 등 런던 개발을 적극 수행
-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장 등 제한법을 폐지했고 2006년 공업재배치촉진법을 폐지
- 프랑스는 1980년대 과밀부담금제, 공장설립허가제를 폐지하거나 완화
-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공업용지 총량규제 등 입지규제, 과밀부담금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한 중복 규제가 존재하여 도시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 수도권 관련 규제



01. 선제적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정책만이 천만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을 아시아 최고의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도쿄, 싱가포르, 베이징, 상하이와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인식
- 수도권의 중복규제를 폐지하고 경쟁력 강화전략 필요



02. 기존 도심 활성화, 신산업 거점 형성,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 지역 활성화 해법을 위해 노후주택정비와 연계 필요
- 금융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자원조달 기법을 개발하여 수익성을 제고 (자원과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원 간 결합 등 검토 가능)
- 계획 프로세스에서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강화,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조치 필요

